

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 도 자 료</h1>	2017. 1. 16(월)	
		작 성 · 문 의	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외교심의관 김창식 / 사무관 유무호 (Tel. 044-200-2250)
* 즉시 사용			

한반도·동북아 정세 점검 및 대책 회의

- 일관된 정책으로 외교안보 분야 도전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
- 미 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입체적 정책조율·공조 본격 추진
- 대북 압박 3개 축을 중심으로 북한 비핵화 노력 및 미 행정부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책동 대비 강화
- 일·중·러 등 주변국과의 안정적 관계 및 북핵·북한 관련 유엔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추진

□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.16(월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반도·동북아 정세 점검 및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의 외교·안보 환경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다.

※ 참석자: 경제부총리, 외교부·통일부·국방부장관, 산업부2차관 / 국가안보실장, 국무조정실장, 외교안보수석, 국무1차장 / 주중국대사, 주미국대사, 주유엔대사, 주일본대사, 주러시아대사

○ 오늘 회의는 △북한의 핵·미사일 고도화 지속 △미 신행정부 출범 △동북아 정세의 유동성 증대 등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 및 이에 따른 도전과 과제를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더욱 면밀히 검토·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개최되었다.

□ 동 회의에서는 △북핵·북한 문제 △미 신 행정부와 협력 △중·일·러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 등 문제에 대한 현지 대사들의 현장 시각·평가

및 경제부총리·안보실장의 방미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, 전략 토의를 통해 외교·안보·통상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.

-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대해 국익 수호와 증진을 위한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서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
- 미국 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동북아정세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관련국들과의 북핵·북한 문제 공조 등을 강화하고, 주변국들과의 교류·협력 확대를 통한 안정적 관계 발전을 추진
 - 한·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·미·일 / 한·중·일 협력 등을 활용하여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발전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역내 역할·입지를 강화
- 미국 신 행정부와는 그간의 협력 기반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북핵·북한, 한·미 동맹, 경제통상 등 제반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간 정책 조율 및 공조를 본격 추진
 - 미 행정부 주요인사의 의회 인준 동향 등을 감안하면서, 방미·방한 등을 통한 고위급간 신속한 정책 협의 추진
 - 미 행정부 실무진 및 싱크탱크 등을 활용한 소통과 정책 조율도 입체적으로 추진
 - 구체 이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이슈별로 방식 및 시기를 선별하여 대응
- 북핵·북한 문제 관련, △안보리 제재 △주요국 독자 제재 △글로벌 압박 등 이미 구축된 3개 축을 중심으로 북한 비핵화를 지속 견인해 나가도록 한·미 공조 및 중·러와의 전략적 소통 강화
 - 미 행정부 교체를 틈탄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기만적 대화 공세 등 책동 가능성에도 대비

- 한·중 관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, 양자·다자 차원의 대응 및 필요한 설명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, △외교안보 및 경제부처간 협업 △기업과의 소통 강화 등 대응 체제 강화
 - 아울러,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및 교류·협력 증진을 꾸준히 추진
 - 한·일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·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기초하에 관련 사안에 대처
 - 한·러간 안정적인 관계발전을 추진하면서, 특히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양국간 소통과 신뢰를 증진
 - 북한 인권문제 관련 최근 국제사회의 공조 모멘텀을 살려 안보리 등 유엔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
-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금일 회의의 주요 결과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, 지금과 같은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일수록 국민들의 우려와 기대 또한 높다는 것을 명심하고 높은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. 끝.